



정책/제도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승인안의 주요내용

■ 배경

- 유럽연합이 지난 3월 13일 ‘인공지능법(AI Act, 이하 AI 법)’ 최종안을 가결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법을 제정. 27개 회원국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후 20일 후에 발효.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1)

*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

**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 행동 강령은 발효 후 9개월, 거버넌스를 포함한 범용 AI 규정은 발효 후 12개월,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발효 후 36개월 후부터 적용됨

- (AI Act 입법과정) 2021년 4월 처음 제안되어, 2024년 3월 최종승인 됨
 - (제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법률안 제안(‘21.4.22)
 - (의견청취)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의견(‘21.9.22)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의견(‘21.12.29)
유럽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의견(‘21.12.2)
 - (논의)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논의(‘23.4.23 ~ ‘24.3.18)
 - (승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1차 독회(first reading), 최종승인(‘24.3.13)
- (EU의 AI 관련법률) EU에는 AI 법, AI 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 그리고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이하 PLD)이 있는데,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EC는 다음과 같이 밝힘2)

1) 정빛나,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연합뉴스 2024.3.14.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61682?sid=104>>

2)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

- AI 법은 AI 시스템이 설계 및 사이버 보안 기능에 의한 로깅을 포함하여 높은 안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규정
- PLD는 법원이 제품 결함 여부를 평가할 때 AI 법에 명시된 것을 포함(PLD에는 AI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제품임이 명시되어 있음)하며, AI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사망, 부상, 재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PLD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가 가능
- AI 책임지침은 특정 조건에서 청구인이 관련된 AI 시스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주요내용

1. ‘인공지능법(AI Act)’의 주요내용

가. AI 법의 목적

- 동 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것으로 고위험 인공지능(AI)으로부터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³⁾ 이 법률은 AI 개발에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의 위험도를 4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금지대상과 범위, 출시 전 적합성 평가 및 기타 규제 여부를 달리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AI 활용 분야의 분류)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위험도에 따라 (i) 수인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 (ii) 고위험(high risk), (iii)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iv) 낮은 위험(minimal risk)으로 분류⁴⁾

나. AI 응용의 금지 범위

-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불특정한 얼굴

3) Yasmina Yakimova and Janne Ojamo, ‘Artificial Intelligence Act: MEPs adopt landmark law’, European Parliament News, 2024.3.1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8IPR19015/artificial-intelligence-act-meps-adopt-landmark-law>>

4)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Excellence and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xcellence-and-trust-artificial-intelligence_en#boosting-excellence-in-ai>.

이미지를 스크랩 하는 등 같이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특정 AI 응용(applications) 행위를 금지*

* 강간·테러와 같은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용 범위를 크게 제한함

○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점수평가(social scoring · 소셜 스코어링)*, 예측 치안(개인 프로파일링이나 특성 평가에만 기반한 경우),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람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의 AI 금지

*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

○ 위와 같은 금지행위(AI법 제5조) 위반 시 35,000,000 EUR의 벌금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 중 더 큰 금액을 부과

다. 법 집행의 예외사항

○ 법 집행 기관에서 생체인식시스템(RBI)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간과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고 사전에 사법 또는 행정 허가를 받는 등의 엄격한 안전 조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포 가능

○ “실시간(Real-time)” RBI는 엄격한 보호 조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배포 가능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사후(“post-remote RBI”) 사용하는 것은 고위험 사용 사례로 간주되어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적 승인 필요

* 예컨대 실종자를 대상으로 수색하거나 테러리스트 공격을 예방하는 경우

라.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

○ 보건,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잠재적 피해로 인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의무에 합의

* 고위험 AI 사용의 예로는 주요 인프라,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 의료·금융과 같은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법 집행, 이주 및 국경 관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같은 사법 및 민주적 절차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시스템은 위험을 평가 및 줄이고, 사용 로그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의 감독(oversight)을 보장해야 함

○ 시민들은 AI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마. 투명성 요건

- (범용 AI*에 대한 별도 규제) 범용 AI(General-purpose AI, GPAD)*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범용 AI 모델은 EU 저작권법(EU Copyright Law)을 준수하고,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공개하는 등 특정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

**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

- 특히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범용 AI 모델*일수록 모델평가 수행,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사고 보고 등의 추가 요건에 부합해야 함

*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함.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

- 인공적이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딥페이크)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 범용 AI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의무, 평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의 3% 또는 또는 15,000,000 EUR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음

바.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 혁신적인 AI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과 테스트를 마련

2. 미국 AI 정책동향

- 2023년 3월 미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성명서를 통해, AI 산출물이라도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발표. 단,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SW 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2호 참고

- 2023년 10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인공지능(AI) 개발·이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⁵⁾

* 주요내용으로는 (i) 개발기업 안전성 검사 결과 공유 의무화, (ii) 정부 서비스 공개 전에 안전성에 관한 검증 실시, (iii) 인공지능이 만든 음성·화상인지 여부 식별 가능하게 해야 함, (iv)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기술개발 지원이 있음⁶⁾

- 3월 28일, 미 정부는 ‘인공지능 행정명령’ 후속정책으로 연방 정부기관들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규칙을 발표⁷⁾

-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채용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

*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이 포함

-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인공지능 활용 내용을 공개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단,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 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3. 국내 AI 정책동향

-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계류 중.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내달 국회

5) Joey Garrison, ‘Biden executive order forces AI companies to share safety test results with government’, USA TODAY, Oct 30, 2023,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10/30/president-biden-signs-sweeping-artificial-intelligence-executive-order/71380002007/>>

6) 이본영, “AI의 안보·건강 위협, 정부에 보고해야”...바이든 행정명령, 한겨레, 2023.10.31.일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14310.html>>

7) 임지우, ‘미국,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연합뉴스 2024.3.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8169900009?input=1195m>>.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⁸⁾

-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와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을 위해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음

[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법률안

제안일자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2023.8.8	2123709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3.2.28	2120353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등 14인
2022.12.7	211872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2021.11.24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2021.7.19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2021.7.1	211126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23인
2020.10.29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0.9.3	210351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23인
2020.7.13	21018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 국가전략’ 마련(‘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발표(‘20), 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23)*,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

* SW 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3호 참고

** 지난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로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에는 정보주체가 AI 등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해당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표] EU AI법의 저작권 관련조항과 미국, 한국의 저작권 정책 비교

	EU의 ‘AI ACT’	USCO ‘정책성명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AI 학습데이터의 취급	범용 AI 모델이 EU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과,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를 공개할 것을 규정	-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 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것을 권고
AI 산출물	AI로 조작된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명시할 의무 규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 가능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 가능
AI 저작자 인정여부	-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8) 김호진, ‘21대 국회 계류 법안만 1만7000건…총선 앞두고 줄폐기 위기’, 한스경제 2023.12.14.일자,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549>>

■ 시사점

- EU의 AI법은 EU와 교류하는 역외 사업자들도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U를 시작으로, AX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본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김호진, ‘21대 국회 계류 법안만 1만7000건…총선 앞두고 줄폐기 위기’, 한스경제 2023.12.14.
- 이본영, ‘“AI의 안보·건강 위협, 정부에 보고해야” …바이든 행정명령’, 한겨레, 2023.10.31.
- 임지우, ‘미국,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연합뉴스 2024.3.28.
- 정빛나,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연합뉴스 2024.3.14.
- Joey Garrison, ‘Biden executive order forces AI companies to share safety test results with government’, USA TODAY, Oct 30, 2023.
- Yasmina Yakimova and Janne Ojamo, ‘Artificial Intelligence Act: MEPs adopt landmark law’, European Parliament News, 2024.3.13.
-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Excellence and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8호> 발간일은 4월 25일입니다.